최고를 꿈꾸는 자의 선택! 클릭(Click)! 육군닷부
Dream to be the top, Click ! go Army

「대한민국 육군장교 선발」

국사 필기평가 준비 참고자료

참고자료는 장교선발 필기평가 응시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일부분만 요약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응시자는 출제자료(P 37-1~2,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등)를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육 군 본 부

'국사'과목 필기평가 출제 개요

❑ 적용대상 : 장교 선발평가 대상자 전원

* 3사, 학군(여군), 학사, 여군, 학사예비, 간부사관, 군장학생

❑ 출제 수준 및 의도

○ 육군 장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기본소양 또는 실무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

※ 대체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 준함

○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과정에서 군대가 기여한 역할 강조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 출제 범위

○ 조선 후기 개항기(1850~1860년대) ~ 2000년대 초반

○ 주요 출제 세부 항목

- 국난 극복 및 민족의 항쟁
-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역할
-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과정에서 군대의 기여
- 동아시아 평화구축(주변국의 역사왜곡 포함)

❑ 출제 유형

○ 4지 택 1형(20문항, 25분 평가)

❑ 출제 자료

○ 기본자료 : 검정『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6종(2010. 7. 30일 검정)

※ 출판사 : 법문사, 지학사, 천재교육, 비상교육, 삼화출판사, 미래엔 컬쳐 그룹

○ 참고자료

- 이기백, 『한국사신론』(서울 : 일조각, 1999)
-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서울 : 경세원, 2004)
- 변태섭, 『한국사통론』(서울 : 삼영사, 2005)
-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http://www.historyfoundation.or.kr/) 중 <동북아 역사이슈>

❑ 출제 일람표

주 제	내 용
개항과 근대화 운동	개항과 외세침탈
	근대화 운동
일제의 식민지배와 민족운동	식민지배와 수탈
	민족운동과 저항
	임시정부와 광복군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분단체제 형성과 배경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군의 역사적 전통과 역할	의병항쟁
	일제강점기 무장투쟁
	6·25전쟁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	개헌과 정치발전
경제 발전과 세계 속의 한국	전후복구와 기반마련
	산업화와 경제성장
	현재의 국가위상
남북통일과 동아시아 평화구축	통일 노력과 정책
	북한의 대남도발 및 경제정책
	역사분쟁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주요쟁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본 자료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쟁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자료로써 대한민국 장교선발을 앞 둔 응시자들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기초자료입니다.

1.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국군의 건군에 대한 올바른 이해
3. 6.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
4.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올바른 이해
5. 국군의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유지 기여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국가에게 있어서 정통성(正統性, Legitimacy) 은 국민에 대한 통치권 행사의 합법성과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전통과 문화에 대해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논리적 근거이다. 즉 어떤 정치체제 또는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합법성의 준거가 되고 구성들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정통성이다.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국제사회가 제시한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준수한 점이다. 신생국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유엔의 결정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국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만들었으며, 헌법을 근간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국되었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승인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대한 인정이며,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역사적 정통성이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전문에"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라고 적시하여 3·1운동을 국가적 정통성의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으며, 국민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출발하였음을 밝혔다.

대한민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에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난 극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이며, 더 나아가 근대적 산업경제를 건설하고 안정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정착시킨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건국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자유선거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세계가 놀랄만한 높은 수준의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1995년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는 위업을 달성하였고, 2011년 12월에는 세계 9번째로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발전하였다.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발전은 1948년 제헌 헌법에 담긴 건국의 이념과 방향이 정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건국의 기초이념을 충실히 유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안정과 번영을 이룬 것이다.

2. 국군의 건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 국군의 명맥은 구한말 항일 의병운동, 일제 강점기 독립군과 광복군이 치열하게 전개했던 항일 독립전쟁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투쟁으로서 의병과 독립군을 계승한 광복군의 정신은 조선경비대를 거쳐 대한민국 국군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광복군을 모체로 태어난 국군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국군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동시에 공식적인 국가기관으로 창설되었으나, 건군 이전에도 조선경비와 같은 국가 방위체로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특히 이들은 해방 이후 건국에 이르기까지 좌익들이 주도하는 사회 혼란을 해소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하였다.

초대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이범석(李範奭)은 국방부 훈령 제1호를 통해"우리 육·해군 각급 장병은 대한민국 국방군으로 편성되는 영예를 획득하게 되었다." 육군과 해군에 대한 이와 같은 명칭은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과 12월 7일 국방부직제(대통령령 제37호)가 제정 공포됨으로써 정식으로 편입, 법제화 되었다.

해방과 국토분단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창군과 건군을 통해 성장한 국군은 국토 경비와 사회 불안요소 제거 등을 통해 건국 초기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북한의 기습으로 시작된 6.25전쟁에서는 열세한 병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3. 6.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본 자료는 임의 스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의 불법 기습남침으로 시작되었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약 3년 1개월간 지속되었다. 이 기간 중에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에 맞서 싸웠으며, 특히 38도선을 세 차례나 넘나드는 격전을 치르면서 한반도의 약 80%가 전장이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승인한 스탈린은 무기 공급, 군사고문단 파견 등 김일성을 남침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어서 중국의 마오쩌둥으로부터 전쟁 계획을 묵인 받은 김일성은 북한군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면 공격을 도발하였다.

북한군으로부터 기습 남침을 받은 국군은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내주며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까스로 형성한 한강방어선으로부터 피로 얼룩진 낙동강 방어선에 이르기까지 적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서 싸웠으며, 유엔군의 참전으로 힘을 얻어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6.25전쟁은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전개되었다. 첫째 단계는 북한군이 38도선을 돌파하여 낙동강 선까지 이르렀던 북한군의 남침기(1950.6.25~9.15)로 인민군의 공세 속에서 미군의 지원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38도선을 넘어 압록강변의 초산까지 진격했던 유엔군의 반격 및 북진기(1950.9.15~11.25)로, 이 시기에 유엔군의 38도선 북진과 중공군의 개입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단계는 중공군의 침공 및 유엔군의 재반격기(1950.11.25~1951.6.23)로, 유엔군의 후퇴가 이루어졌고 이어 전쟁이 제한되면서 38도선 부근에서 전선이 고착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휴전회담의 진행과 쌍방이 38도선 부근에서 공방전을 전개하였던 교착전기(1951.6.23~1953.7.27)로, 휴전협상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소모전이 계속되었다.

6.25전쟁 중에 북한과 국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또 다른 전쟁발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가장 먼저 1951년 7월부터 훈련 수준이 낮고 무기 체계도 형편없는데다가 규모도 고작 10만여 명에 불과했던 국군에 대한 재편성과 증강 작업이 시작되었다. 미군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국군의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동시에 국군에 대한 대대적인 증강 작업이 이뤄졌다. 그 결과 국군은 전차와 포병 등을 갖춘 현대화된 군대의 면모를 갖췄으며, 규모 면에서도 20개 사단, 약 60만 명을 보유한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군은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양국 사이에 동맹관계를 강화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오늘날 연합방위 체제의 법적 근간으로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과 정부간 또는 군사 당국자간의 각조 안보 및 군사관련 후속 협정들의 기초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한미간의 굳건한 동맹관계는 이후 대한민국이 국가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4.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올바른 이해'

6.25전쟁이 휴전으로 멈춘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대남 위협은 지속되었다. 북한은 1961년 중국 및 소련과 각각 군사 동맹조약을 체결했으며, 1962년에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본격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이후 북한은 군사력 증강과 함께 군사적 모험주의 노선을 채택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시험하기 위해 일련의 도발을 자행하였다. 북한의 대남도발 행위와 무장침투는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급증하기 시작했고, 행위 자체도 더욱 대담해지고 대규모화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 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질보다는 양 위주의 전력증강을 지속해 왔다. 특히 전·후방 동시공격 능력과 고속 종심공격 능력, 선제기습타격 능력의 향상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말 이미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기계화군단의 편성, 대규모 특수부대의 확보와 장거리포 추가 전진배치 등 3개월 이상의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무기 현대화에 치중했던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은 전략무기 체계를 구축하여 군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속전속결형 공세적 군사전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이용해 미국에 대응하는 비대칭 억지전략을 병행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

1968, 청와대 기습사건(1.21사태)
1968, 푸에블르호 납치사건
1968,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1971~1992, 남침용 땅굴 굴착
1976,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83,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1987, KAL 858 폭파사건
1996,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1999, 2002 제1, 2차 연평해전
2010, 천암함 폭침, 연평도 포격

북한군의 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선제기습공격으로부터 무장특공부대의 우회기습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짜여있다. 또한 사거리 60Km 이상의 장사정포 1,000여 문을 전방지역에 추진 배치·증강하고, 80여 개의 비행기지를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하는 등 북한은 앞으로도 선제기습전략을 기본적인 군사전략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10년 북한은 우리 영해에서 작전 중인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하였고, 심지어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사망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허를 찌르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우리가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방법을 통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차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우리들이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5. 국군의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유지 기여에 대한 '올바른 이해'

건군 당시 5만여 명에 불과하던 한국군은 6.25전쟁을 통해서 장비와 인적자원 면에서 현대적인 군대로 발전하였다. 6.25전쟁 중에 한국군은 미군으로부터 현대적 군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군사제도를 도입하고 최신 장비와 무기체계 및 현대적인 부대관리 운영시스템을 받아들였다. 한국군은 국민 개병제를 통해 징집된 수많은 젊은이들을 교육 훈련시켰고, 군대의 각 분야에 복무시켰다. 또한 우리 국군의 많은 장교와 부사관, 전문 인력들은 군의 필요에 의해서 외국 혹은 국내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이들은 군 복무 후 다시 사회로 나아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군대는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 국민교육의 도장 역할을 하였으며, 군대를 경험한 젊은이들은 국가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

한국군의 획기적인 증강은 곧 군대조직의 능률과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지휘 및 관리 능력의 향상과 교육훈련 체계의 선진화를 가져왔다. 다수의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을 선발하여 미 육군 보병학교, 포병학교 등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군의 자질향상에 기여하였다. 한국군이 국가 근대화 과정에서 기여한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한국군이 보유한 기술 및 관리 능력은 비교우위와 조직적인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한국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국가 근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군의 기여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측정할 수 있다. 한국군의 사회적 역할이 가장 잘 드러난 부문은 국토개발이다. 특히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1960년대 초반, 상대적으로 발달된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군대가 국토건설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었으며,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에 공헌하였던 것이다. 국가 근대화에 기여한 한국군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군대가 육성한 다양한 종류의 기술자, 전문가 및 전문 인력이 사회로 배출되었으며, 이들이 군대에서 배운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근대화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이다.

한편 1990년대 이래 국군은 유엔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국군은 1993년 소말리아를 시작으로 앙골라, 인도·파키스탄, 동티모르, 사이프러스, 서부사하라, 부룬디, 레바논 등지의 PKO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왔다. 또한 국군은 유엔 PKO 활동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다국적군 활동에도 참가하였다. 한편 동맹국인 미국의 협조자로서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는 대규모 파병을 실시한 바 있다.

< 한국군 파병 약사>

(2011. 9월 기준)

임 무	파병기간	파병부대	연인원
월남전	1965.3.10 ~ 1973.3.23	주월사, 맹호, 백마, 십자성, 비둘기, 백구, 은마(8개부대)	32만 5천 517명
걸프전 지원	1991.1.24 ~ 4.10	사우디 국군의료지원단	154명
	1993.7.30 ~ 94.3.18	아랍에미리트 공군수송단	160명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1993.7.30 ~ 94.3.18	소말리아 공병대대	516명
	1995.10.5 ~ 96.12.23	앙골라 공병대대	600명
	1997.3.3 ~ 98.3.31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장	1명
	1999.10.4 ~ 03.10.23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3,283명
	2000.1.16 ~ 04.6.5	동티모르 참모 및 연락단	45명
	2002.1.4 ~ 03.12.23	사이프러스 사령관	1명
	1994.8.9 ~ 06.5.15	사부사하라 국군 의료지원단	542명
	2004.9.15 ~ 06.12.1	부룬디 임무단	4명
	참모장교 : 07년 1월~현재 서부여단 참모 : 08년 1월~현재	국제연합 IFIL 협조단 (참모장교와 서부여단 참모)	참모장교 : 6명 서부여단 참모 : 5명
	2007.7.19 ~ 07.7.19	레바논 동명부대	1,077명
	2010.2 ~ 현재	아이티 단비부대	480명
아프칸 항구적 자유작전	2001.12.18 ~ 03.9.1	해군 수송지원단	823명
	2001.12.21 ~ 03.12.20	공군 수송지원단	446명
	2002.7 ~ 07.1.26	CFC-A 참모	9명
	2002.2.27 ~ 07.12.14	다산, 동의부대	2,112명
	2001.11 ~ 현재	CJTF-82 협조반 등	60명
이라크 자유작전	2003.4.30 ~ 04.9.30	의료지원단(제마), 건설 공병지원단(서희)	제마 185명, 서희 956명
	2004.9.30 ~ 현재	자이툰, 다이만 부대, 동맹국 협조 및 참모장교 등	18,050명
해양안보작전	2009.3 ~ 현재	소말리아 아데만 청해부대	1,836명
국방협력	2011.1 ~ 현재	UAE 아크부대	130명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국사' 과목 필기평가 준비 참고자료

Ⅰ. 조선의 근대 개혁 운동

1. 흥선대원군의 정책

가.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혁 정치

1) 배경 : 세도정치 타파 및 왕권의 안정, 삼정(군정·전정·환곡)의 문란 시정

2) 개혁 내용 : 통치체제 정비, 삼정의 문란 시정, 서원 철폐, 경복궁 중건

3) 의의 : 국가 기강의 확립과 민생 안정에 노력함

4) 한계 : 전제 왕권 강화를 목표로 추진, 근대적 개혁에는 미흡함.

나. 통상 수교 거부와 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상 요구와 평양 군민의 격퇴
1866년	**병인양요**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함대의 침공 외규장각 도서를 비롯한 문화재 약탈 강화도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양헌수)에서 프랑스 군대 격퇴 ※ 외규장각 도서가 최근 반환됨
1868년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 상인 오페르트의 남연군묘(대원군의 부친) 도굴 시도
1871년	**신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한 미국 함대의 침입 초지진과 덕진진 점령. 광성보 전투에서 어재연의 분전 미군 철수
	척화비 건립	내용 :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음은 곧 화친(화의, 화해)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건립 : 신미양요 직후 전국 각지에 건립. 서양의 침입에 대한 투쟁 의지와 민심 결속 강화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2. 개항과 불평등조약 체제의 성립

가. 강화도 조약 체결과 개항

1) 강화도 조약(1876)의 배경

가) 국내 :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 통상개화파(박규수)의 개항 주장

나) 국외 : 운요호 사건과 일본의 문호개방 요구

2)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가) 부산을 비롯해서 3개의 항구를 개항

나) 일본의 해안 측량권 허가

다) 치외법권 인정

※ 최초의 근대적 조약·불평등조약

나. 서양 열강과 조약 체결

1)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1882)

가) 배경 : 황쭌센의 『조선책략』과 대미수교의 분위기 형성

나) 내용 :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 인정, 불평등 조약

다) 의의 :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2) 서구 여러 나라와의 조약 체결 :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3. 개화 정책의 추진과 갈등

가. 개화 사상의 형성과 초기 개화정책

1) 개화 사상의 형성

가) 19세기 중엽에 형성, 자주적인 문호 개방과 근대적 개혁 주장

나) 실학의 북학파·일본의 메이지 유신·청의 양무운동 영향 → 통상 개화론 발전

2) 개화 정책

가) 통리기무아문과 12사 설치

나) 5군영 → 2영 통합 및 별기군(신식 군대) 창설

다) 해외사절단 파견

명칭	파견 국가	주요 활동
수신사	일본	개항 이후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 2차 수신사 김홍집(1880)은 『조선책략』을 가지고 옴.
영선사	청	무기제조법과 근대식 군사 훈련법 습득
신사유람단 (조사시찰단)	일본	일본의 정부기관, 산업시설, 군사시설 시찰
보빙사	미국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후 파견

나. 개화사상의 분화

구분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
중심 인물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개혁 방향	민씨 정권과 원만한 관계 유지,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점진적인 개혁 추구 ※동도서기론 : 유교전통(정신문화)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물질 문화)만 수용	일본의 문명개화론의 영향을 받음. 서양의 과학 기술 뿐만 아니라 서양의 사상 수용 및 정치·사회의 급진적 개혁 추구.
모델	청의 양무 운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

다. 위정척사 운동

1) 배경

가) 외세의 침략적 접근, 일본에 의한 개항

나)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 천주교의 유포, 개화사상,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2) 개념 : 성리학[正學] 이외의 종교, 사상을 사학(邪學)으로 규정하여 배격

3) 전개

연대	핵심 주장	주요 인물	주요 내용
1860년대	통상 반대	기정진, 이항로	척화 주전론, 흥선 대원군의 대외 정책 지지
1870년대	개항 반대	최익현, 유인석	왜양 일체론, 개항 불가론 등 주장
1880년대	개화 반대	이만손, 홍재학	상소 운동(영남 만인소) 전개
1890년대	항일 의병	유인석, 기우만	일본의 침략에 저항

본 자료는 법의 부정 및 불법을 금지합니다.

4) 의의

가) 외세의 침략에 강력히 저항

나) 봉건적 사회 질서 유지, 세계사의 흐름 거부

다) 일부는 서양 문물과 전통 문화의 발전적 계승 주장

라. 임오군란(1882)

1) 배경

가) 군제 개혁,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민씨 정권과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나)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로 인한 가격 폭등, 서민 생활의 궁핍화 가중

2) 전개

가) 구식 군대의 폭동과 도시 하층민 가담 : 민씨 정권의 고관 살해, 궁궐 난입, 일본 공사관 습격

나) 흥선 대원군의 재집권 : 개화 정책 중단, 군제 복구

다) 청군의 개입과 민씨 세력 재집권 : 청나라의 흥선대원군 납치

3) 결과

가) 청군의 조선 주둔과 고문 파견 : 내정과 외교 문제 간섭, 청의 조선 속방화 정책 강화

나)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 청 상인의 특권 보장

다)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에 배상금 지불,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 허용

마. 갑신정변(1884)

1) 배경

가) 국내 : 온건 개화파가 개화 정책 주도, 급진 개화파의 반발

나) 국외 : 청국 군대가 청국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조선에서 임시 철수, 일본의 개화당 지원 약속

2) 전개

가)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거사 - 친청파와 민씨 일파 제거 - 개화당 정부 수립 -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

나) 14개조 정강 발표 : 청에 대한 조공 허례 폐지, 인민 평등권 확립, 지조법 개혁, 모든 재정의 호조 관할, 내각 중심 정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함

※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위한 최초의 정치적 개혁 운동

3) 결과

가) 청과 일본의 대립 격화, 친청 보수 세력의 장기 집권, 개화 세력의 위축

나) 한성 조약(조선, 일본) : 일본에 배상금 지불, 공사관 신축 비용 부담

다) 톈진 조약(청, 일본) : 청.일 양군 동시 철수, 이후 조선 출병 시 사전 통보, 청·일 전쟁 발생의 빌미가 됨.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4. 서구 열강의 침탈과 사회·경제적 변화

가. 서구 열강의 침탈과 조선중립화론

1) 영국의 거문도 점령(거문도 사건) : 조선과 러시아의 비밀 협약 소문을 빌미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1885~1887)

2) 조선 중립화론 : 한반도를 둘러싼 열가의 대립 심화로 독일인 부들러, 유길준 등이 제기

나. 개항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

1) 일본 상인들의 무역 활동

가)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조일무역규칙 체결 : 불평등 조약 체결, 치외법권, 거류지 설정, 개항, 일본 화폐 사용, 무관세 무역 설정

나) 일본 상인들의 개항장 진출 : 약탈적 무역 활동

다) 일본 상인 : 영국산 면제품과 조선 원자재의 중계 무역으로 이윤

2) 대외 무역의 변화

가) 1882년 : 임오군란으로 인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청나라 상인 대거 침투

나) 청일 상인 간 경쟁 : 청 상인이 가격 면에서 우위 차지하면서 상권을 장악해 감

다) 일본 상인 : 곡물 수출에 주력, 입도선매, 고리대, 조선의 흉작으로 조일 무역 쇠퇴

라) 조일 무역 쇠퇴, 청 상인의 상권 장악 : 청·일전쟁의 한 원인이 됨

3) 개항 후 경제 침탈에 대한 대응

가) 방곡령 : 일본의 곡물 유출에 대응. 조일통상장정(1883)에 근거해서 조선정부가 방곡령 실시. 그러나 실패하여 일본 상인에 배상금 지불

나) 상회사 설립 : 1890년대 초부터 각종 상회사 설립, 회사 설립 운동, 운수업, 금융업, 철도 부설, 농수산업 부문에 두드러짐

Ⅱ.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제국주의의 침략

1. 동학농민운동과 청·일 전쟁

가. 동학농민운동

1) 배경

가) 외세의 침략, 정부의 압제, 삼정의 문란, 곡물 유출로 인한 식량 부족 등

나) 동학 : 교단 조직을 통해 농민.지식인들을 조직화, 정치 운동으로 승화

(1) 공주.삼례 집회 : 교조 신원 운동 전개, 종교 운동

(2) 보은 집회 : 농민 참가, 탐관오리 배격, 농민 중심의 정치 운동으로 발전

2) 전개

가) 고부 민란 :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가 심해지자 전봉준 주도로 고부에서 민란 발생

나) 1차 봉기 : 백산 집결, 황토현 전투, 전주 화약(농민군 승리)

(1) 전주 화약 :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 설치, 폐정 개혁 실천, 농민군과 타협 모색

다) 2차 봉기 : 일본의 침략 본격화(일본의 내정 간섭 강화), 동학 농민군의 재봉기, 공주 우금치 전투 패배

※ 농민 주도의 근대적 개혁 운동 좌절

3) 의의

가) 반봉건.반외세 농민 운동, 갑오개혁에 영향, 의병 전쟁의 활성화에 기여

나) 구체적인 근대 국가 건설 방안 결여, 농민 이외의 지지 기반 확보에 실패

나. 청·일전쟁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1) 배경

가) 조선에서 청과 일본의 대립 격화: 양국 상인의 대립

나) 동학농민운동 당시 텐진조약(1885)에 의한 청·일 양국 군대 조선 파병

2) 전개

가) 조선 철병을 거부한 일본군이 청 함대 기습

나) 일본의 제해권 장악, 산둥 반도의 청 해군 기지 공격

3) 결과

가)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 랴오둥 반도, 타이완 할양받음.

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간섭으로 랴오둥 반도는 청에게 돌려줌.

2. 근대 국가 수립 운동

가. 갑오·을미개혁

1) 배경 : 동학 농민군의 개혁 요구, 개화 세력의 개화 의지, 일본의 내정 개혁 강요

2) 개혁의 추진

1차 개혁(1차 갑오개혁)	2차 개혁(2차 갑오개혁)	3차 개혁(을미개혁)
• 군국기무처 주도 : 초정부적 기구 • 정치 : 개국 연호 사용, 왕권 약화, 내각 권한 강화, 과거제 폐지 • 사회 : 신분제 철폐, 봉건적 폐습 타파, 고문.연좌제 폐지 • 경제 : 재정 일원화, 도량형 통일, 조세 금납화	• 박영효 중심으로 추진 • 홍범 14조 발표 • 청의 간섭과 왕실의 정치 개입 배제 • 중앙.지방 행정 개편 • 사법권과 행정권 분리 • 군제 개혁 소홀	• 친일 내각 수립(1895) • 단발령 실시 • 태양력 사용 • 종두법 시행 • 우편 사무 시작 • 소학교 설치

3) 의의

가) 봉건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근대적 개혁, 농민층의 개혁 요구 일부 수용

나) 일본의 침략 의도 개입, 민중의 지지 획득 실패

나. 독립협회 활동

1) 배경 : 열강의 이권 침탈(아관 파천), 근대 문물의 필요성, 민중 계몽에 대한 관심

2) 주도 세력(1896) : 초기 서재필 등 개화 지식층 중심, 점차 각계각층의 인사 참여
(지식인·정부 관료·도시 시민층·학생·노동자·여성·천민)

3) 주요 활동

가) 민중 계몽, 독립문 건립, 강연회.토론회 개최, 신문.잡지 발간

나) 윤치호·남궁억 중심 : 관민 공동회 개최(헌의 6조), 전제 황권 강화 주장

다) 서재필 중심 : 만민 공동회 중심, 군주권 제한을 주장

4) 해산 : 독립 협회가 공화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보수파의 모함, 정부에서 황국협회와 군대 동원하여 강제 해산

5) 의의

가) 자주 국권 운동: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에 기초, 열강의 이권 침탈 반대

나) 자유 민권 운동: 근대 국민 국가 건설 목표, 국민 기본권, 참정권 보장 요구

다) 자강 개혁 운동: 자주적 근대 개혁을 통한 국력 배양 목표, 의회 설립 요구

다.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1) 성립

가) 배경 : 고종의 경운궁 환궁, 독립 협회와 국제 여론의 요구

나) 대한국 국제 제정(1899)

(1) 국호는 대한 제국, 연호는 광무

(2) 전제 황권의 강화 추구, 군대 통수권, 입법권, 사법권을 황제 권력에 집중시킴.

2) 전개

가) 특징 : 구본 신참의 정신, 점진적 개혁 추구

나) 내용 : 양전 사업, 지계 발급, 상공업 진흥책, 지방 제도 개편, 근대적 교육 제도 마련, 근대 시설 도입 추진 등

3) 의의

가) 근대 주권 국가 지향, 국방.산업.교육 등의 분야에 성과

나) 복고주의(전제 황권 강화), 민권 운동 탄압, 집권층의 보수적 성격과 열강의 간섭으로 성과 미흡

3. 국권 피탈과 국권 수호 운동

가.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1) 한·일 의정서(1904) 러·일전쟁 중에 체결, 한반도의 군사 요지 사용권 획득

2) 제1차 한·일 협약(1904) 재정.외교 등에 고문 파견

3) 화폐 정리 사업(1905) : 재정고문 메가타가 한국의 화폐 발행권을 빼앗기 위해서 실시. 구 백동화와 상평통보를 제일은행권으로 바꿔주는 정책, 실제 교환기간이 짧았으며 일부는 교환을 거부함. 국내 상공업자들이 타격을 받음. 일본제일은행이 한국의 중앙은행으로 됨.

4) 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1905) : 대한 제국의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초대 통감에 이토 히로부미 임명
5) 헤이그 특사 사건(1907) : 국제사회의 무관심,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6) 제3차 한·일 협약(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 1907) : 행정 각부에 일본인 차관 임명, 부수 각서에 군대 해산 명시
7) 기유각서(1909) : 사법권, 감옥 사무를 일본에 위탁, 사법권.경찰권 강탈
8) 한·일 병합 조약(1910, 국권 피탈) : 대한제국의 주권 강탈, 식민지로 전락

※ 간도협약(1909) : 백두산정계비의 해석을 둘러싼 청과 한국정부의 갈등, 대한제국은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1902), 일제는 청과 간도협약(1909)을 체결하여 만주의 철도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획득하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함.

나. 제국주의 열강의 반응

1)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7월) :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양국이 서로 인정함
2) 제2차 영·일 동맹(1905. 8월) : 영국의 인도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양국이 서로 인정
3) 포츠머스 조약(1905. 9월) : 러·일 전쟁 이후 체결된 조약, 러시아는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

다. 애국계몽운동

1) 성립 : 개화파 계열의 계몽 운동가, 교육과 산업을 통한 실력 양성 주장
2) 주요 단체
가) 보안회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나) 헌정 연구회 : 을사늑약 체결 후 독립 협회를 계승하여 조직. 정치 의식 고취 및 입헌 군주제 수립 주장, 일진회 규탄
다) 대한 자강회 : 교육 진흥, 산업 개발 등 실력 양성에 의한 국권 회복 운동, 헤이그 특사 파견에 따른 고종이 퇴위하자 이에 대한 격렬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가다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
라) 대한협회 : 교육 보급, 산업의 진흥, 민권 신장 추구
마) 신민회 : 민족 운동가들의 비밀 결사,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 실력 양성 운동,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교 설립
3) 주요 활동
가) 교육 운동 : 국권 회복을 위한 구국 교육 운동, 서북 학회, 기호 흥학회 등
나) 언론 운동 : 국민 계몽과 애국심 고취, 황성 신문, 대한 매일 신보 등
다) 산업 운동 : 경제 단체 조직, 상권 보호, 근대 경제 의식 고취, 국채 보상 운동
4) 의의
가) 국권 회복과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동시에 추구, 실력 양성 운동으로 계승
나) 일본의 방해와 탄압,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 어려움

라. 항일 의병 운동의 전개

1) 을미의병(1895)
가) 원인 : 을미사변과 친일 내각의 단발령 시행
나) 특징 : 유인석.이소응 등 유생들이 주도, 농민과 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 참여
다) 해산 : 아관파천 후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자진 해산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2) 을사의병(1905)

가) 원인 : 을사늑약의 체결, 국권 회복을 전면에 제기

나) 특징 : 참여 계층의 확대(평민 의병장 신돌석 출현), 전술 변화, 반침략 운동의 성격

3) 정미의병(1907)

가) 원인 : 고종의 강제 퇴위, 군대 해산, 해산 군인의 의병 가담, 전투력 향상

나) 특징 : 의병 전쟁의 양상, 서울 진공 작전 실패, 남한 대토벌 이후 만주, 연해주로 이동, 독립 운동 기지 마련

다) 의의 : ① 일본군에 비해 조직과 화력 열세, 유생 출신 의병장의 보수적 성격, 국제적 고립,
②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의 기반 마련, 국권 상실 이후 독립군 가담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최고를 꿈꾸는 자의 선택! 클릭(click)! 육군닷부
Dream to be the top, Click ! go Army

Ⅲ.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1. 일제의 식민지 통치

가. 무단 통치

1) 조선총독부의 무단 통치

가) 헌병 경찰을 앞세운 일제의 폭력적 통치 방식, 관리와 교사들까지 칼을 휴대, 태형 제도 부활

나) 한국인의 정치 활동 금지,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나. 토지조사사업

1) 목적 :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 확립, 기한부 신고주의, 소작인의 경작권 부정

2) 결과 : 조선 총독부의 조세 수입 증가, 합법적인 토지 약탈, 소작농의 지위 하락, 식민지 지주제 확립, 농민의 해외 이주

다. 기타 : 회사령, 삼림령, 어업령, 광업령 등 제정, 식민 지배 체제 확립

2. 문화 통치와 민족 분열 정책

가. 문화 통치

1) 배경 : 3.1 운동의 영향, 일본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2) 내용 : 유화적인 식민 통치 방식, 조선 총독의 문관 임명 가능, 보통 경찰 제도 실시, 부분적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허용, 교육 기회 확대(초등 교육과 기술 교육에 치중), 지방 제도 개편 등

3) 목적 : 한국인의 이간.분열 유도, 친일파 양성, 독립 운동의 역량 약화 기도

4) 결과 : 합법적인 민족 운동 확대, 자치 운동 등 타협적인 민족 운동 등장, 민족 운동 내부의 분열.혼선 발생

나. 산미 증식 계획

1) 배경 : 일본의 급격한 공업화로 도시 노동자 증가.농촌 인구 감소, 쌀 수요 증대

2) 내용 : 한국에 대규모 농업 투자, 쌀 생산 증대, 일본으로 유출

3) 결과 : 한국인의 식량 사정 악화(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으로 충당)

다. 민족 말살 정책과 병참 기지화 정책

1) 민족 말살 정책

가) 배경 : 만주 사변(1931), 중.일 전쟁(1937), 태평양 전쟁(1941) 등, 전시 동원 체제 강화

나) 내용 : 민족 운동 봉쇄를 위한 각종 악법 제정, 언론 탄압, 군과 경찰력 증강

(1) 황국 신민화 : 내선 일체, 일선 동조론 주장

(2) 신사 참배, 황궁 요배,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강요

(3) 우리말 사용 금지, 학술.언론 단체 해산, 창씨 개명,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할 목적

2) 병참 기지화 정책

가) 목적 :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전쟁 물자 생산 기지로 이용

나) 한국의 공업화 : 일본 독점 자본의 진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군수 공업, 중화학 공업 시설 확충
다) 전시 수탈체제 강화 : 국가 총동원법(1938), 전쟁 말기로 갈수록 심화
(1) 인적 자원 수탈 : 지원병제, 징용, 징병, 학도병,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
(2) 물적 자원 수탈 : 식량 공출과 배급제 실시, 전쟁 물자 공출, 산미 증식 계획 재개(중단), 가축 증식 계획, 금속 물자 수탈

3.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

가. 3. 1 운동 이전의 민족 운동

1) 국내 민족 운동의 전개
가) 독립의군부(1912) : 의병 전쟁 계열의 독립 단체로서 복벽주의를 표방, 비밀 결사 단체
나) 대한광복회(1915) : 계몽 운동 계열의 독립 단체로서 복벽주의를 반대하고 공화주의를 주장,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 단체

2) 국외 민족 운동의 전개
가) 독립 전쟁론의 대두 : 실력 양성론과 의병 전쟁론 결합, 독립 운동 기지 건설 운동
나) 만주 지역의 독립 운동 기지
(1) 삼원보 : 자치 기관인 경학사와 부민단 조직,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사관 양성
(2) 북간도 : 용정에 서전 서숙, 명동 학교 등 설립, 대종교 계통의 항일 단체인 중광단 결성
다) 연해주 지역의 독립 운동 기지 : 신한촌 중심, 밀산부(한흥동) 중심, 권업회 조직, 대한 광복군 정부조직, 대한 국민 의회로 발전
라) 미주 지역의 독립 운동 기지 : 안창호, 이승만 등이 대한인 국민회 조직, 외교 활동을 통한 구국 운동 전개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나. 3. 1 운동

1) 배경
가) 국제 정세의 변화 :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소련의 '소수 민족 해방 운동' 지지 선언
나) 신한청년당의 활동 : 독립 청원서를 작성하여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
다) 무오(대한) 독립 선언서(1918) : 중광단이 중심이 되어 발표한 선언, 무장 투쟁의 혈전을 통한 완전한 독립을 주장
라) 2·8 독립 선언서(1919) :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이 중심이 되어 독립 선언서 발표

2) 전개
가) 독립 선언 : 대외적으로 독립 청원, 대내적으로 비폭력 원칙을 표방
나) 민족 대표 33인 : 천도교계 15명, 기독교계 16명, 불교계 2명으로 구성
다) 일제의 탄압 : 제암리 학살 사건 등 일제는 군대와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유혈 진압
라) 해외로 확산 : 만주와 연해주 지역 동포들의 만세 시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독립 선언식 거행, 일본 유학생들의 만세 시위 전개

3) 의의
가)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의 변화 : 헌병 경찰에 의한 무단 통치에서 고등 경찰에 의한 문화 통치로 전환
나) 민주 공화정 운동의 확산 : 기존의 복벽주의를 타파하고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 정치 주장
다) 민족 독립 운동의 조직화, 체계화 필요성 대두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설립
라) 세계 반제(反帝) 운동과 약소 민족 해방 운동에 영향 : 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불복종 반영 운동 등
마) 자주 독립을 추구한 거족적인 민족 운동 : 민족의 독립 의지 고취

Ⅳ.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민족운동의 발전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가. 배경과 주요 활동

1) 배경 : 3.1 운동을 통해 효율적인 독립 운동 단체의 필요성 대두, 각지에 임시 정부 수립,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 통합

2) 정체 : 최초의 민주 공화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선포, 외교 활동에 중심

3) 주요 활동 : 연통제. 교통국, 독립 자금 모금, 강대국들을 상대로 외교 활동 전개, 군사 활동, 문화 활동(사료 편찬소 설립, 독립신문 간행)

나. 임시정부의 위기와 재편

1) 정부 기능 약화 :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와의 연락망 붕괴, 자금난, 인력난

2) 내분의 심화 : 이념과 노선의 차이로 독립 노선에 대한 갈등 심화, 외교 독립론과 독립 전쟁론

3) 임시정부의 재편

가) 국민 대표 회의(1923) :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 결렬되면서 임시 정부의 위상 크게 약화

나) 지도체제 개편 : 대통령 중심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1925), 국무 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1927), 주석제(1940)

다) 충칭정부(1940) : 중.일 전쟁 이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칭으로 이동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2. 국내의 다양한 민족운동

가. 신간회와 실력 양성운동의 전개

1) 신간회의 활동과 그 의의

성립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계의 통합, 전국 각지에 지부 설립
활동	민중 계몽 활동, 각종 사회 운동 지도,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지원 등, 민중들의 전폭적 지지
해체	일제의 탄압, 집행부의 개량화,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의의	최대 규모의 반일 사회 운동 단체, 최초의 민족 협동 단체로 활동

2) 실력 양성론

가) 배경 : 즉각 독립에 대한 회의, 문화 정치에 대한 기대, 사회 진화론의 영향

나) 내용 : 신교육 보급, 민족 자본 육성 등, '선 실력 후 독립' 주장

3) 물산 장려 운동

가) 배경 :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 확대로 민족 자본의 위기 심화, 민족 자립 경제 추구,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시작(1920), 전국으로 확산

나) 내용 : 국산품 애용, 근검 저축, 생활 개선, 금주.단연 운동 등

다) 한계 : 민족 기업의 생산력 부족, 상품 가격 인상, 친일 세력의 관여로 일제와 타협, 사회주의 계열과 민중들이 자본가들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 민중의 외면

나. 문화·사회적 민족운동

1) 한글의 연구와 보급

가) 조선어 연구회(1921) : 한글 보급 운동과 대중화 노력, '가갸날'제정, 잡지 '한글' 발간

나) 조선어 학회(1931) : 조선어 연구회를 개편하여 결성,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조선어 표준어'제정,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하였으나 조선어 학회 사건(1942)으로 해체

2) 한국사의 연구

가) 민족주의 사학 : 한국사의 주체적 발전과 정신 사관 강조, 박은식·신채호

나) 사회경제 사학 : 한국사의 보편적 발전성 강조, 백남운

3) 문맹 퇴치 운동

가) 문자 보급 운동 : 조선일보가 주도한 문맹 퇴치 운동

나) 브나로드 운동 : 동아일보가 주도한 문맹 퇴치 운동,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

다) 조선어 학회 : 전국에 한글 강습소 개최

4) 사회적 민족 운동

가) 여성운동 : 근우회 결성(1927),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함

나) 소년운동 : 방정환의 활동

다) 형평운동 : 신분해방운동, 백정들에 의해 조직

라) 민족 유일당 운동 :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뛰어 넘어 온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식민 통치를 극복하려는 움직임

다. 항일운동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1) 6·10 만세 운동(1926)

가) 배경 : 일제의 수탈 정책과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발,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민족 감정이 고조

나) 전개 : 사회주의 계열과 학생층의 준비, 사회주의 계열의 준비는 일제에 의해 발각

다) 의의

(1)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연대 가능성 제시,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회 설립에 영향

(2) 학생 운동의 고양에 큰 영향을 미침, 국내 독립 운동 세력의 중심적 위치로 부상

2)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

가) 배경 : 식민지 차별 교육에 대한 불만

나) 전개 :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신간회의 지원으로 전국적 항일 투쟁으로 발전

다) 의의 :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

3. 국외의 무장 투쟁

가. 1920년대 의열단과 한국애국단의 활약

1) 의열단의 활동

가) 배경 : 3·1 운동 이후 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무장 투쟁 단체의 필요성 대두

나) 조직 : 김원봉이 1919년 11월 만주 길림성에서 조직

다) 활동 : 일제 요인 암살 및 식민 지배 기구 파괴(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등)

라) 성격 변화 : 조직적 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별적인 의열 활동의 한계를 인식

(1) 황포 군관 학교에 입학 :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군사 훈련, 군사 간부 양성

(2) 조선 민족 혁명당 설립(1935) : 당 조직을 결성하여 보다 대중적인 투쟁 시도

2) 한인 애국단의 활약(1926)

가) 배경 : 1920년대 후반 임시 정부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항일 무력 단체 결성 요구

나) 활동

(1) 이봉창의 의거(1932) : 일왕 폭살 기도 사건, 상하이 사변의 계기가 됨

(2) 윤봉길의 의거(1932) : 홍커우 공원 폭탄 투척 사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 주는 계기가 됨

나. 1920년대 만주와 연해주 독립군 부대들의 활약

1) 배경 : 3·1 운동 이후 무장 독립 전쟁의 조직적 전개 필요성 대두

2) 독립군 부대의 조직

서간도	· 서로 군정서군 : 신흥무관학교 출신 중심 · 대한독립단 : 의병장 출신 중심
북간도	· 북로 군정서군 : 대종교 계통, 김좌진 중심 (청산리 대첩) · 대한 독립군 : 의병장 출신의 홍범도 중심 (봉오동 전투)

3) 독립군의 승전 : 봉오동 전투(1920년 6월), 청산리 대첩(1920년 9월)

4) 독립군의 시련

가) 간도 참변(1920년 10월) :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보복, 독립군을 지원하는 동포 사회를 파괴, 독립군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함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나) 자유시 참변(1921) : 독립군 부대의 지휘 체계 통일을 목적으로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결성, 소련 적색군과 연합, 내전에 참가하고자 자유시로 이동, 독립군 내부지휘권 다툼과 적색군의 무장 해제 요구, 독립군 희생, 무장 해제

다) 미쓰야 협정(1925) : 일제와 만주 군벌 간에 맺은 협정, 만주 독립군 토벌에 상호 협조 약속

5)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

가) 3부의 결성 : 만주 지역 독립 단체들 간의 활발한 통합 운동, 참의부(압록강 연안의 임시 정부 직할 단체), 정의부(길림과 봉천을 중심으로 한 남만주 일대), 신민부(북만주 일대, 소련 영토에서 되돌아 온 독립군 중심)

나) 3부의 성격 : 만주 한인 사회를 통치하는 자치 조직으로서 민정 기관과 군정 기관을 갖춤

다) 3부의 통합 운동 : 민족 유일당 운동의 흐름에 따라 활발한 통합 운동 전개

(1) 남만주 : 국민부가 조직되고, 군사 조직으로 조선 혁명군 결성

(2) 북만주 : 혁신 의회가 조직되고, 군사 조직으로 한국 독립군 결성

다. 1930년대 무장 독립 전쟁

1) 한·중 연합 작전의 전개

가) 배경 : 일제의 만주 침략과 만주국 수립으로 중국 내 반일 감정 고조

나) 한국 독립군의 활동(지청천) :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항,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승리

다) 조선 혁명군의 활동(양세봉) :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항,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승리

라) 한·중 연합 작전의 위축

(1) 일본군의 북만주 초토화 작전, 중국군의 사기 저하

(2)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항일전에 대한 의견 대립 발생

(3) 한국 독립군은 임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국 본토로 이동

(4)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이 일제에 의해 살해됨에 따라 세력이 급속히 위축(1934)

2) 동북 인민 혁명군(1933) : 중국 공산당에 소속된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만주 지역 항일 무장 투쟁 전개, 중국 공산당이 동북 인민 혁명군을 조직하자 이곳의 일원이 되어 항일 유격전 전개

3) 동북 항일 연군 : 민생단 사건을 계기로 동북 항일 연군으로 변경, 민족을 초월한 항일 연합군(참여의 폭을 넓힘)

4) 중국 본토에서의 조선 의용대의 활약

가) 민족 혁명당 결성(1935) : 민족 독립 운동의 단일 정당을 목표로 결성(민족주의 + 사회주의)

나) 조선 의용대(1938)

(1) 민족 혁명당이 중국 정부의 협조를 걷어 결성한 군사 조직

(2) 중국군 작전을 보조하는 부대로 중국 여러 지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

(3) 1940년 이후 일부는 조선 의용군으로, 일부는 한국 광복군으로 편성됨

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한국광복군의 활동

1)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조직 강화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가) 한국 독립당의 결성(1940)

(1) 민족주의 계열의 3개 정당(한국 국민당, 한국 독립당, 조선 혁명당)이 연합하여 결성

(2) 김구가 중심이 된 단체로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집권 정당의 성격을 띰

(3) 김원봉의 조선 민족 혁명당의 합류로 단일화된 무장 투쟁 전개

나)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

2) 한국 광복군의 활동

가) 한국 광복군의 창설(1940) : 중국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창설,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 흡수 통합

나) 한국 광복군의 활동 : 태평양 전쟁 발발 후 대일 선전 포고, 영국군과 연합 작전 전개(인도, 미얀마 전선 파견), 미국 전략 정보처(O.S.S)와 협약을 맺어 국내 진입 작전 준비(일제 패망으로 무산)

Ⅴ.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1. 광복과 분단

가. 광복과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

1) 1945년 8월 15일 광복

가) 내적 요인 : 지속적인 독립 운동의 결과

나) 외적 요인 : 연합군의 제2차 세계 대전 승리, 일본의 항복

회담	참가국	주요 내용
카이로회담(1943. 11월)	미국, 영국, 중국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국가로 해방"
얄타회담(1945. 2월)	미국, 영국, 소련	소련의 대일전 참전, 38선 분할 결정
포츠담선언(1945. 7월)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카이로 회담(한국의 독립) 재확인

2) 38선 분할과 건국준비

가) 38선 분할: 미국과 소련의 진주, 38도선 분할과 주둔

나) 다양한 정치세력의 활동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 조선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나. 미 군정 실시와 신탁통치 논의

1) 미군정의 실시(1945. 9. 7) : 모든 행정 기구와 활동 부정

* 38도선 이북지역 : 소련군 진주,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김일성 등 공산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권수립 수립 추진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2)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년 12월)

가) 목적 : 미국·영국·소련 3국 외무장관의 한반도 문제 논의

나) 내용 :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최대 5년간 신탁통치 실시

다) 좌·우의 반응과 대립

구 분	주요 인물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대한 반응
우익	김구, 이승만	신탁통치 반대, 반탁 운동 전개
중도	김규식, 여운형	정부 수립 이후 신탁 통치 문제 논의
좌익	김일성, 박헌영	반탁 → 찬탁

다. 국·내외의 독립 문제 논의

1)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1946. 3월): 소련의 반대

2)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 6월): 남한 단독정부 수립 주장

3) 좌·우 합작 7원칙 발표(1946. 10월): 김규식·안재홍,

4)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1947. 5월~1947. 7월)

2. 통일 정부 수립 노력과 대한민국 수립

가.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

1) 유엔총회(1947. 11월):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 통일 정부 수립 결의

2) 유엔 소총회(1948. 2월)

가) 북한의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입북 거부

나) 선거 가능 지역에서만 총선거 결의(남한지역 총선거 결의)

나. 1948년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5·10 총선거(1948)

가) 국회의원 선출 : 임기 2년·198/200명(제주도 일부 지역 투표 무산)

나) 제헌국회 구성과 헌법 공포(1948. 7. 17) : 삼권 분립의 대통령 중심제

다) 제헌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부통령 이시영 선출 : 간선제

2)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8. 15)

*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음으로써 대외적 정통성 확보

3.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

친일파 청산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년 9월), 특별소급법적용(공소시효 2년) 활동 : 반민족행위자 명부작성, 친일파 체포시작 이승만 담화문(반공우선),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사건 반민법 공소시효 단축 및 반민특위 해체(1949년 8월), 친일파 청산 실패
농지개혁법 (1949)	농지개혁법 제정(1949년 6월), 6·25로 중단, 57년 완수 지주의 농지 유상매입, 소작농에게 유상분배 경자 유전의 원칙 실현, 지배계급으로서 지주제 소멸, 공산화방지
귀속재산 처리법 (1949)	신한공사 : 귀속재산 접수, 처리미비 이승만 정부 수립 후 귀속재산 처리법 제정 1950년대 독점 자본 형성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4. 6·25전쟁

가. 배경

1) 북한의 전쟁 준비

가) 소련에서 최신 무기 도입

나) 중국에서 조선 의용군 편입

2) 국제정세 변화

가) 중국 대륙의 공산화(1948년 10월)

나) 애치슨 선언(1950년 1월) :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 제외

나. 전개

1) 북한군의 기습 남침(1950. 6. 25)과 서울 함락(1950. 6. 28) : 낙동강 방어선 구축(1950년 8~9월)

2) 인천상륙작전(1950. 9. 15)과 서울 수복(1950. 9. 28) : 평양 탈환과 압록강 진격(1950년 10월)

3) 중국군 참전(1950년 10월)과 1·4 후퇴: 서울 재함락

4) 재반격과 전선 교착(1951~1953) : 휴전 회담 개최(1951. 7. 10)

5) 이승만의 휴전 반대운동과 반공포로 석방(1953. 6. 18)

6) 휴전 성립(1953. 7. 27)

다. 결과

1)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을 합쳐 수백만명의 사상자와 이산가족, 전쟁고아가 발생

2) 도로, 주택,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시설의 대부분 파괴

* 한반도의 약 80%가 전장이 되는 엄청난 피해 발생

3) 분단의 고착 : 적대 감정 심화, 남북 무력 대결 상태 지속

*** 전쟁으로 인해 피해현황(출처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구 분	남 한		유엔군	북 한		중국인민 지원군	계
	민간인	군인		민간인	군인		
사망	37만여 명	13만여 명	3만여 명	40만여 명	52만여 명	11만여 명	156만여 명
부상	22만여 명	45만여 명	11만여 명	160만여 명	22만여 명	22만여 명	282만여 명
실종	38만여 명	2만여 명	6천여 명	68만여 명	9만여 명	3만여 명	120만 6천여명
계	97만여 명	60만여 명	14만 6천여 명	268만여 명	83만여 명	36만여 명	558만 6천여명

***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1953년 10월 1일)**

제1조 당사국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 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의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제3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국은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비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으로서 주한미군 지휘협정과 정부간 또는 당국자간 각종 안보 및 군사관련 후속협정들의 기초를 제공함

Ⅵ. 민주주의의 정착과 대한민국의 발전

1. 헌법 개헌

개헌과정	핵심내용
헌법제정 1948. 7. 17 공포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중임 .간선제(국회에서 선출) .부통령, 국무총리 둠 .단원제 국회
제1차 개정(발취개헌) 1952. 7. 7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중임 .직선제
제2차 개정(사사오입) 1954. 11. 29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 .직선제 .국민투표제
제3차 개정(의원내각제 개헌) 1960. 6. 15	.의원내각제 .양원제 .사법권의 민주화, 경찰 중립화, 지방자치의 민주화
제4차 개정(부정선거 처벌 개헌) 1960. 11. 29	.부정축재자 처벌 등 소급법 근거 마련 .상기 형사사건처리를 위한 특별재판서와 특별 검찰부 설치
제5차 개정(제 3공화국 헌법) 1962. 12. 2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중임 .직선제 .단원제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실시
제6차 개정(3선 개헌) 1969. 10. 21 국민투표 실시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3기 .직선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겸직 허용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강화
제7차 개정(유신헌법) 1972. 12. 27 국민투표 실시	.대통령 중심제, 임기 6년 중임제한 철폐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대통령의 권한강화, 국회권한 조정 .헌법개정절차 일원화
제8차 개정(제 5공화국 헌법) 1980. 10. 27 국민투표 실시	.대통령 중심제, 임기 7년 단임 .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 .구속적부심 부활, 연좌제 금지 .헌법개정절차 일원화
제9차 개정 (제 6공화국 헌법 - 현행 헌법) 1987. 10. 27 국민투표 실시	.대통령 중심제, 임기 5년 단임 .직선제 .국정감사 부활로 국회권한 강화 .비상 조치권 국회해산권 폐지로 대통령 권한 조정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2. 경제 발전과 국가위상 제고

가. 광복 직후의 경제 혼란

1) 일제 강점기 주요 산업과 기술을 일제가 독점

2) 광복 직후

가) 남북한 경제 불균형

.남한 : 농업과 경공업 중심

.북한 : 전력과 중화학 공업 중심

나) 경제혼란

.미군정: 미곡 자유 거래 허용으로 곡가 폭등 → 미곡 수집령

.부족한 재정 보충을 위한 화폐 남발 : 통화량 급증 → 인플레이션

.북한의 전력 공급 중단

.해외 동포 귀환과 북한 동포의 월남으로 인한 인구증가 → 실업자 증대.식량부족

나.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전후복구

1) 농지개혁법 : 1949년 6월 공포, 1950년 3월 시행

가) 목적 : 농민 안정, 일제하 일본인 및 지주의 토지 재분배

나) 방식 : 유상매수, 유상분배

다) 성과와 한계 : 지주 축소, 농민의 경제적 빈곤 유지, 이농현상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2) 전후복구의 노력과 미국의 경제원조

가) 전후 국가재정 악화와 물가 폭등

나) 미국의 잉여농산물 제공과 삼백 산업(소비재 산업) 발달 : 밀가루, 면화, 설탕

다. 산업화와 경제성장

1)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개획 수립

제1차 (1962~66)	.공업화와 자립 경제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 .사회 간접 자본(도로, 항만, 철도) 확충 .의류, 신발, 합판 등의 경공업 위주의 수출
제2차 (1967~71)	.산업 구조의 근대화와 자립 경제의 확립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 포항제철 착공(1970) .마산, 이리(익산)에 자유무역 지역 조성(1970) .새마을 운동 시작 → 근면, 자조, 협동
제3차 (1972~76)	.중화학 공업화 추진 및 농어촌 개발 .수출 증대에 따른 국제 수지 개선 .1차 석유 파동 → 중동 특수
제4차 (1977~81)	.자립 성장 구조 확립 .사회 개발을 통한 형평 증진

나) 외국자본유치 :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전쟁

다)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 수립 : 급격한 경제성장, 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

라) 1970년대 중공업 육성 : 고도성장과 석유파동(1차 1973, 2차 1979)

2) 1980년대 중·후반 경제호황과 시장개방

가) 3저 호황 : 저금리·저유가·저달러

나) 우루과이 라운드(1986)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

3) 1997년 외환외기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신청

가)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 문제 발생

나) 김대중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4) 세계 속의 한국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1996)과 세계 10위권 경제규모

나) 국제사회의 역할 증대 : PKO(유엔 평화 유지군) 활동 外

* PKO : 대한민국 국군은 유엔의 일원으로 분쟁지역(레바논 등)에 파견하여 평화유지군 활용에 적극 참여함

3. 북한 현대사

가. 김일성 독재체제의 수립

기 간	주요 내용
6·25 전쟁	무정, 허가이 숙청
1953~1955년	남로당계(박헌영, 이승엽) 숙청
1955~1958년	연안파와 소련파 숙청
1967년	갑산계 숙청

나. 김일성 독재체제의 확립

(1) 1967년 주체사상 채택 : '김일성 유일 체제'

(가) 김일성 개인숭배와 김일성 가계의 성역화 작업 추진, 북한의 통치이념으로써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체계화함

(2)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공포 : 국가 주석제 채택

(가)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으로 선출된 김일성은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력 장악

(3) 1970년대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착 : '3대 혁명 소조 운동(사상·기술·문화의 3대 부분 강조)'

(4) 1984년 합영법의 제정 : 해외 자본 유치 시도

(가) 1984년 자립 경제 체제에 한계를 느낀 북한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영법(합자 회사 경영법)을 발표, 대외 경제 교류를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다. 북한의 대남도발과 위기

(1)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푸에블르호 납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 1. 21 청와대 습격 : 1968. 1. 21. 북한군 124군부대 소속 무장고비 31명이 휴전선을 넘어 침투하여 대통령관저인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사건

*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울진, 삼척지구에 무장공비 120명 침투한 사건

(2) 1983년 아웅산 테러 :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친선 방문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의 아웅산 국립묘소 참배를 이용, 암살하기 위해 사전에 이 묘소건물 천정에 설치한 원격조종폭탄을 폭발시켜 한국의 부총리, 장관 등 수행원 17명을 순국케하고 14명을 부상시킨 사건

(3) 1987년 KAL기 폭파 : 1987. 11. 29 대한항공 858기를 88 서울올림픽 개최방해를 위해 대외정보조사부 소속 공작원(김현희, 26세)을 이용하여 라디오와 술병으로 위장한 폭발물로 공중에서 폭발시켜 승객·외국인·승무원 등 115명이 사망한 사건

(4) 1996년 강릉 무장공비(잠수함) 침투 : 1996. 9. 18. 인민무력부 정찰국 해상처 22전대 소속 무장공비 25명을 전쟁에 대비하여 한국의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강원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석하는 주요인사들을 암살하기 위해 잠수함을 이용하여 침투시킨 사건

(5) 2010년 연평도 포격 : 2010. 11. 23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170여발을 포격한 사건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4.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

가. 통일 정책

1) 1970년대 통일 정책의 변화: 평화 공존 분위기 조성 대북교섭 시작

1970	**8.15 평화 통일 선언**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 교류 협력, 총선거 제시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
1971	**남북 적십자 회담**	.남북 실무진 접촉을 통한 이산 가족 상봉 제안
1972	**7.4남북 공동 성명**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통일 문제 협의 공식 대화 기구)
1973	**6.23평화 통일 선언**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합의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에도 문화 개방
1974	**평화 통일 3대 원칙 제시**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제안 .다각적 교류와 협력 제안 .남북한 자유 총선거 실시 제안

2) 1980년대 이후 통일 정책

전두환 정부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제시(1982) 최초 대규모 물자 교류: 북한의 수재 물자 제공(1984) 분단 이후 최초 이산 가족 상봉(1985)
노태우 정부	7.7 특별선언(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 1988)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민주 공화제 통일 국가 수립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발표
김영삼 정부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선언 남북 정상 회담 개최 합의 → 김일성 사망으로 무산(1994. 7) 3단계 통일 방안(1994):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한민족 공동체 건설 경수로 건설 사업 추진(1996)
김대중 정부	남북 정상 회담(2000. 6) → 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 이산 가족 방문단 교환,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경의선 복구, 개성공단 설치

※ 남북한 통일 방안 비교

구분	남한	북한
통일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94)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1980)
과정	화해 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완성 국민투표로 통일 헌법 확정, 총선거 실시	남한의 국가 보안법 폐지 주한 미군 철수 →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수립
과도 체제	남북 연합	없음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특징	민족 통일 우선 건설	국가 체제 건설 우선

본 교안은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나. 남북대화

1) 1971년 남북적십자 회담과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 조국통일 3대 원칙 천명

2) 1991년 유엔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 화해와 불가침 약속

3) 2000년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공동선언 : 남북간 교류와 협력 확대

VII 동아시아 역사분쟁: 동북공정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1)]

1. 상고사 논란

고조선은 우리 민족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국가로서, 그 건국에 관한 설화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등 고려 시대에 저술된 사서에 등장한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거하여 기원전 2300년경을 고조선이 건국된 해로 파악하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의 문헌자료에 고조선에 관한 전승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5세기~3세기경이다. 이 무렵에 저술된 <관자(管子)>와 <산해경(山海經)> 등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삼국유사> 고조선조(條)는 고조선에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포함시켰지만 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이외에 '위만조선'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조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건국신화의 실재성(實在性)에 대한 문제와 영역 및 중심지에 관한 문제 등이다. 단군이 신화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역사적 실체를 신성화한 것인가가 전자의 핵심적인 쟁점이라면, 고조선의 중심지가 한반도 북부의 평양 일원인가 아니면 중국 요령성의 요하(遼河) 일대인가에 대한 논란이 후자의 주된 관심이다. 고조선에 관련된 문헌자료는 한국의 것이나 중국의 것을 막론하고 상당히 영세한 데다 체계적인 기록을 찾아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고조선에 관련된 여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고고학적으로 식별되는 고조선의 표지유물은 비파형동검과 지석묘이다. 비파형동검은 요령성의 요동 지역과 요서 지역, 길림성 일대,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으며, 지석묘는 한반도와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지석묘에서 발전하여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 석관묘, 석곽묘, 적석총 등에서 비파형동검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은 비파형동검과 가지석묘 고조선을 상징하는 주요한 문화적 요소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다만, 요하 일대의 비파형동검이 최초로 출현하는 것은 기원전 12세기경이라 알려지고, 고조선의 배경이 된 청동기문화 역시 철기의 수용 및 중국 문화의 수용과 함께 변화하여 갔기 때문에 고조선을 둘러싼 고고학적 문화의 양상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최근 중국 학계 일각에서는 고조선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여 고조선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간주하려 시도하고 있다. 조선은 은(殷) 나라의 왕족인 기자(箕子)가 진국에 이주하여 건국한 나라로서, 건국 후에는 주(周) 왕실의 조회에 참석하여 그 제후국이 되었으며, 위만조선을 세운 위만 역시 연(燕) 나라 출신일 뿐이고, 후대에는 한(漢) 나라가 위만조선을 정벌하고 그 자리에 4군을 설치하였으므로 고조선의 역사는 중국사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자조선을 입증하는 문헌자료로 즐겨 인용되는 <상서대전(尙書大傳)>은 한 나라 때에 편찬된 것으로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의문이 있어왔다. 또 중국학계의 몇몇 연구자는 최근 대릉하 일대에서 발견된 '기후(其侯)' 명 청동기로써 이 지역에 기자가 이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후 명문이 새겨진 동기는 중국 전역에서 출토되어 이곳에서 발견된 기후 명문 동기와 기자를 직접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견해와, 기후 명문의 청동기가 대릉하 일대에서 발견된다고 해서 그것이 기후가 이 지역으로 이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반론으로 제기되어 있다. 연 나라 출신의 위만이 고조선의 정권을 찬탈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은 고조선의 지배층 일부가 교체되었음을 의미할 뿐 국가의 정체성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즉 위만의 왕위 찬탈 이후에도 조선이라는 국호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정권의 고위직에 조선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만조선 역시 고조선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1) 자료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http://www.historyfoundation.or.kr/) 중 <동북아 역사이슈> 참조

고조선과 더불어 국가의 정체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된 것이 부여이다. 부여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494년까지 지금의 북만주 송화강 유역 평야지대에서 번영한 농업국가이다. 부여가 남긴 문화유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송눈평원과 길림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백금보문화(白金寶文化), 한서문화(漢書文化), 서단산문화(西團山文化) 등으로, 이들 문화는 중국의 묘제(墓制) 가운데 하나인 토광목곽묘를 주요 묘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그 유적에서는 중국 계통의 철기와 토기도 적잖이 볼 수 있다. 때문에 중국 학계에는 이에 근거하여 부여가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면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중국에 신속(臣屬)하게 된 고대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라 간주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중국 고대의 역사서인 <삼국지>에는 부여가 예맥의 땅에 있었다는 기록하여 이들이 예맥족의 한 갈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후대에 고구려인들과 백제인들이 부여의 직접 후계임을 주장하여 깊은 동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마가(馬加), 우가(牛加), 저가(猪加), 구가(狗加) 등 지금까지 전하는 부여의 주요 관명이 중국의 그것과는 다른 계통에 속한다는 점 등을 들어 부여는 한민족의 원류로 간주되는 예맥족이 세운 국가 고대의 하나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부여 유적과 유물에 나타나는 중국의 영향 또한 선진문화의 자발적인 수용이란 측면에서 이해되며, 부여의 국가적 정체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2. 고구려사 논란

고구려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른바 '동북공정'에서 중국학계가 "고구려는 중국의 고대 소수민족 지방정권이었으므로 고구려사는 중국사에 속한다."고 보는 인식 아래 고구려사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줄임말로,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2002년 2월 28일부터 5년간 시행한 연구사업이다. 동북공정의 연구대상은 고구려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등 중국의 동북 3성지역에서 일어난 과거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을 포괄한다. 그러나 동북공정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2003년 당시, 고구려사의 중국사 귀속 관련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일반에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사건으로, 또는 '고구려사 빼앗기' 사업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본 자료는 업이 수정 및 출력을 금지합니다

고구려사의 귀속문제에 대한 중국의 자국중심주의적 인식에 대해 우리 학계와 국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2004년 8월, 한중 두 나라는 고구려사 문제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학문적 차원에 국한시킨다는 내용의 구두양해각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동북공정은 지속되었고, 동북공정식 논리가 중국 일반인에게까지 여러 형태로 확산되자, 2006년 9월과 10월, 노무현 前대통령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구두 양해각서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5년 계획의 동북공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각종 연구물과 박물관 패널 및 고구려 유적지 표지판 등에 '동북공정식 고구려사 인식'이 담겨 학계와 일반인들에게 전파됨으로써, 고구려사를 둘러싼 역사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양국 간의 장기적인 역사 갈등 문제로 남게 되었다.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고구려사의 중국사 귀속을 논증하기 위해 첫째, 고구려 종족은 중원으로부터 기원했다. 둘째, 고구려는 한사군의 현도군 고구려현 경내에서 건국했고, 427년 낙랑군 경내인 평양으로 천도했으므로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 존재했다. 셋째, 고구려는 중국왕조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했던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넷째,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중국 국내의 통일전쟁, 지방정권의 반란을 진압한 것이었다. 다섯째, 고구려유민의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융입(融入)되었고, 신라로 들어간 고구려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여섯째, 고구려는 고려와 무관하며, 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고구려로 계승된 중국의 고대 소수민족 지방정권이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는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 속하는 지역의 과거사는 모두 중국사'라고 보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상황에 의거하여 고대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므로, 역사왜곡 및 이웃국가들과 역사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많은 영토중심의 역사관이다.

이에 대해 한국 학계에서는 관련 사료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첫째, 고구려는 예맥족이 건국한 나라였다는 것이 중국 정사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국가발전과정에서 다양한 종족이 주민으로 유입되어 다종족 국가가 되었으나 예맥족이 여전히 중심 종족이었다. 둘째, 고구려는 현도군을 축출하고 건국되었다. 고구려의 성장은 한 군현의 퇴출과정이라 할 수 있다. 평양일대는 고조선의 중심지로서 고조선의 계승국인 고구려 先史로서의 역사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평양이 고대 중국의 영역이란 주장은 현재의 영토에 입각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도 모순된다.

셋째, 고구려는 남북조 모두에 조공했고, 조공책봉은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의 국제외교형식이자 무역활동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지방정권이라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천하관은 당시 고구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넷째, 고구려-수, 고구려-당 전쟁은 중국 중심 국제질서구축에 따른 세력권의 충돌 현상으로서 국가 간의 전쟁이었다. 다섯째, 고구려사의 계승문제를 논할 때에는 당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망국민이 된 고구려유민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편입되었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고구려 유민의 자의식과 계승의식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신라의 '일통삼한(一統三韓)' 의식과 발해의 고구려 계승의식을 중시해야한다. 중국으로 편입된 고구려유민에게는 계승의식이 없었다. 여섯째, 고려는 국호에서부터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고, 고구려사, 백제사, 신라사를 선대(先代)의 역사로 정리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편찬했다. 그러나 중국정사에서는 고구려 관련 내용을 시종 외국열전(外國列傳)에 배치했고, 『송사(宋史)』이래 고구려-고려를 계승관계로 서술해왔는데, 최근에 이르러 갑자기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재적 필요와 목적에 따라 과거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구려사를 둘러싼 한중간의 갈등은 학문적인 영역을 넘어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학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중 두 나라를 포함, 여러 나라의 관련 학자들이 학술적인 교류를 통해 여러 쟁점들을 역사학 본연의 차원에서 분석·검토하고, 과학적, 객관적으로 논증하여, 인식 차이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 고구려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할 것은 고구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다. 그런데 고구려사의 경우 관련 문헌사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전체 역사를 복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공백을 두고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소지도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헌사료의 부족은 현전 고구려 유적·유물에 대한 고고학 자료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현재 고구려 유적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에 남아 있다. 고구려 유적 보유국들이 고구려 유적의 조사와 보존 노력을 공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사의 규명과 정립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역사 갈등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3. 발해사 논란

발해는 698년 고왕(高王) 대조영(大祚榮)이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동모산(東牟山: 현재 중국 길림성 소재)에서 진(振, 震)이란 국호로 건국하였다. 이후 발해는 당 및 돌궐, 거란, 남쪽의 신라, 동해 건너 일본과 개방적 대외교류를 지속하여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칭송되었다. 고왕 이후 15대 마지막왕 대인선(大諲譔) 통치 시기까지 전국을 5京 15府 62州로 나누고, 신라도, 일본도, 거란도, 영주도 등의 대외교통로를 두어 동아시아의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발해의 영역은 중국 동북 지방과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북한에 걸쳐 있고, 각국은 발해사를 자국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발해를 말갈족이 세운 당나라 지방정권으로 규정하였고, 러시아에서는 말갈이 중심이 된 연해주 최초 중세국가로, 또 일본은 전통적인 만선사관(滿鮮史觀)에 입각한 발해인식이 이어져 왔다. 현재 각국의 발해사 연구는 위의 역사해석 전통 위에서 계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발해사 연구에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발해가 당시 주변국과 교류한 역사사실을 담은 사료들을 통해 보아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였던 나라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부 외국에서의 발해 연구 시각 중에서는 발해 건국 주체민족이 말갈족이라고 보면서 발해사의 고구려 계승성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 학계는 고왕 대조영이 발해 건국 이후에 당이 고왕을 발해군왕으로 봉하였다는 『당서(唐書)』 기록을 통해 '당나라의 한 지방 정권' 내지 '당대의 발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지만 위 기록은 당나라가 발해의 건국과 실체를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당나라를 중심으로 전개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의 의례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발해는 시호 및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황제국가를 표방하였다. 일본과 교류한 국서를 통해서 부여와 고구려를 계승하였던 독립국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쪽의 신라와는 신라도(新羅道)를 두어 국가교류를 하며 남북국시대 설정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발해의 발달된 정치, 종교, 교육 및 문화 제도는 고구려의 것을 바탕으로 당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여 발해국 나름의 특색 있는 것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발해의 영역은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분포되어 있었고, 발해 관련 사료도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한국에 남아 있어, 그 역사해석에서 많은 이견이 도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발해 유적과 유물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런 면에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등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발굴조사는 바람직한 유적조사의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양국은 발굴 시기나 장소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조사 결과도 매년 공개 발간함으로써 발해사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발해유적 관리 대상국들이 유적과 사료를 놓고 이견이 있는 인식의 간극을 메우는 노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향후 중국에 있는 상경성 등의 발해유적으로부터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크라스키노성 등을 거쳐 일본에 이르고, 다시 육로로 북한의 청해토성 등을 거쳐 남쪽 신라 경주까지 이어지는 등 고대 동아시아 교류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발해사 연구의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4. 임나일본부설 논란

임나일본부설이란 야마토 정권(大和政權)이 4세기 후반에서 562년까지 가야(임나) 지역에 일본부라는 지배기구를 설치하여 통치했다는 학설이다. 8세기초 편찬된『일본서기』에 따르면 369년에 일본이 가야 7개국을 정복하고, 562년에는 任那官家가 멸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官家라고 하는 말은 '미야케(屯倉)'라고 하여 야마토정권의 지방지배의 형태로 왕실직할령적 성격을 지닌다. 요컨대 임나관가란 가야에 설치된 일본고대 왕실의 직할령이 되는 것이다.

이 학설은 황국사관이 지배하던 근대에는 일본의 한국지배의 역사적 근거로서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1880년경 광개토왕비의 재발견으로 동비에 나오는 왜가 한반도남부를 지배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임나일본부설은 의심할 여지없는 정설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이후 한국지배기가 되면 일본의 국정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교육의 현장에서 일본의 우월주의와 한국지배의 정당화에 활용되었다.

1945년 일본의 패전이후 황국사관이 비판받던 시기에도 임나일본부설은 한동안 유지되었다. 이 설이 학술적으로 재검토가 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학자 김석형의「분국론(分國論)」으로, 임나일본부란 야마토정권이 일본열도내의 한반도계 분국에 설치한 것이 그 실태라고 하면서 일본학계의 통설을 부정하였다. 이후 재일동포 사학자 이진희의 광개토왕비문 변조설, 천관우의 백제의 가야지배를 위한 군사령부설이 제기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하지만 이들 제설은 연구사적으로는 큰 의의를 갖지만, 고정화된 틀 속에 갇혀있어 학설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1980년대가 되면 가야문화권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와 『일본서기』에 대한 사료적 재검토가 이루어져 임나일본부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특히 고고학적으로 가야문화의 독자성, 연속성, 선진성이 확인됨에 따라 가야측의 입장을 중시하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한일학계의 주요 학설을 보면, 왜왕권이 파견한 관인설,

가야제국의 대왜 외교기관설, 가야제국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설, 교역기관설, 백제에 의한 지배기관설 등이 제기되었다.

이상의 공통점은 야마토 정권에 의한 가야지배설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나일본부 연구사상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고대한일관계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시기문제도 6세기 전반대로 한정하고 공간적으로는 함안의 안라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데에는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 성격도 가야제국의 이익을 보존하는 쪽으로 임나일본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대세이다.

임나일본부설의 실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사료인 『일본서기』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중요하다. 『일본서기』에서의 임나일본부는 독자의 실체로 움직이는 일은 없고 532년에 신라에 의해 멸망한 금관국 등을 부흥시킨다는 이른바 임나부흥회의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일본천황이 임나부흥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지만, 회의의 주역은 안라국과 백제로 되어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일본천황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으로 나오고 있어 고대일본의 가야지배설과 배치되고 있다.

임나일본부 관인으로 나오는 인물들의 성향은 親가야, 反백제, 非일본적이다. 이것은 특정 국가에 의한 지배기관설을 부정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가야제국이 주변제국으로부터 자립해 나가려는 경향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가야제국의 자립을 주도해 나갔던 것이 안라국이다. 안라국은 광개토왕 비문에도 나오듯이 4세기말 5세기경에는 금관국과 더불어 가야제국의 유력국으로 성장하였다. 6세기 이후가 되면 남부가야의 맹주적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쇠퇴기의 가야제국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 임나일본부 문제가 안라국을 무대로 해서 전개된 것도 가야제국의 자립을 노리는 주체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나일본부의 실태는 가야제국이 국가적 위기에 처한 6세기전반 안라국이 중심이 되어 가야제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한 인간집단 혹은 그 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5. 일본 역사교과서 논란

역사교과서문제는 자국·자민족중심의 편협한 역사인식을 고집함으로써 학교교육에서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교재로 사용되는 교과서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여 주변국과의 협력과 공존, 선린우호 관계를 저해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에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한 갈등과 긴장관계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기술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로 발생하였다.

일본은 1945년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패전을 '과거 청산'의 기회로 삼아 전후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역사인식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 하지만 일본은 근대이후 제국주의·군국주의적인 과거사의 반성을 뒤로 미루고 냉전체제 하에서 보수정치세력의 복귀를 허용하고 경제성장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과거사 문제는 현대 일본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가 주변국과의 평화와 선린우호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시기 일본에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자민당이 탄생하고 집권하게 되었다. 자민당 내 보수우익 세력은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당헌으로 내걸고 교과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과 진보적 교과서 집필자가 기술한 교과서를 문제 삼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는 역사교육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교과서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교과서검정을 강화하여 교과서에서 과거 일본의 침략과 가해사실에 대한 기술을 후퇴하게 하였다.

이러한 역사왜곡에 대해 도쿄 교육대의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교수는 자신이 집필한 교과서에 대한 문부성의 검정 불합격 판정에 대해 불합격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65년과 67년에 제기하였다. (1962년에 이에나가 교수가 집필한「신일본사」(삼성당)가 검정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정정신청본도 대폭적인 수정 요구를 받자, 이에나가는 이러한 교과서검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하여 교과서재판을 제소하였다. 1970년 7월의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에나가교과서에 대한 검정은 위헌·위법이라고 판결(杉本判決)하였는데, 이 스기모토 판결은 헌법,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교육권을 부정하고 국민의 교육권과 교육자유권을 인정하였다.)

이 시기의 교과서문제는 1972년 중일국교회복 이후에 난징학살 사건 등 일본의 가해사실을 부각시킨 교과서가 등장하자 이를 경계하려는 보수 세력의 위기의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문제는 과거 주변지역에 대한 침략의 정당화와 미화를 둘러싼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개되었다. 1982년 6월, 문부성이 검정과정에서 3.1운동을 '데모와 폭동', '출병'을 '파견',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과서 파동이라는 외교문제로 비화하였다.

일본의 교과서왜곡 사실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자, 한국정부는 외교교섭을 중단하고 8월에는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9월에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일본 교과서 39항목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왜곡부분의 시정을 약속하였다. 또한 일본 문부성은 1982년 11월 24일,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에 '근린 아시아 각국과의 사이에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시점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이라는 '근린제국조항'을 추가하여 국제사회의 대일 비판여론을 무마시켰다. 그리고 1986년에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제작한「신편일본사」의 내용에 대해 일본 국내외에서 비판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일본 총리는 문부성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하고 문부성은 이 출판사에 대해 38항목의 수정을 지시하고 출판사가 이에 따르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자민당내 보수정치가들이 '역사검토위원회' 설치(1993년), '자유주의사관 연구회' 발족(1995), 1997년 1월에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향상을 위해 과거사 인식에 대한 재고를 주장하였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교과서에서의 기술 삭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움직임을 일본의 시민단체는 '제3차 교과서 공격'으로 보고 주목하였다.

본 자료는 인하 수정 및 출판을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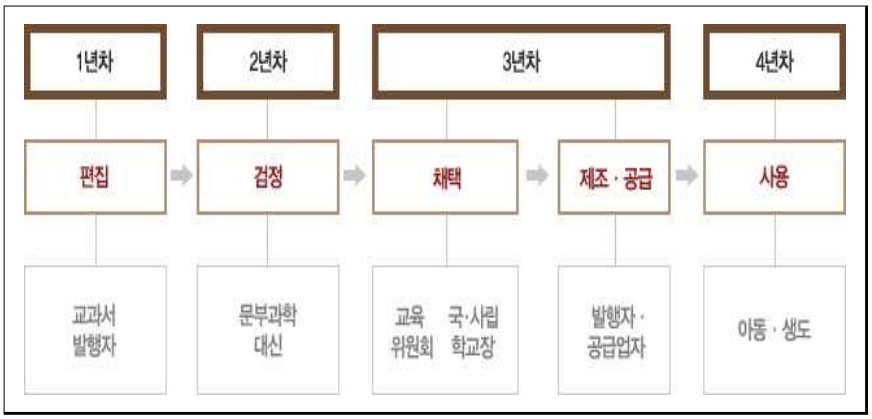
새역모는 2000년 4월에 후소샤(扶桑社)교과서 검정신청을 하고, 이듬해에 130항목 이상 수정이 이루어져 2001년 4월 2일에 최종적으로 검정 통과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대책반을 설치하여 5월에 수정요구안을 작성하였다. 요구안에는 후소샤 교과서에 대해 25항목, 다른 7종 교과서 기술에 대해서 10항목 등 총35항목에 걸쳐 검토의견이 포함되어 일본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후소샤는 2항목을 자발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본정부도 한국 관련 2항목에 대한 수정권고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학설상, 또는 검정 제도상 한국의 수정요구에 의한 재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역모 교과서 채택률의 저조(2001년=0.039%, 2005년=0.39%)를 둘러싸고 새역모 내부에서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분열이 일어났다. 새역모 이탈세력은 보수 세력의 지원을 받아 2006년 10월에 '일본교육재생기구'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2007년 7월에 '교과서개선의모임'을 조직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향후 이쿠호샤(育鵬社)라는 출판사를 통해 교과서를 출판할 예정이다. 한편 새역모 잔류세력은 후소샤 측과 결별하고 지유샤(自由社)라는 교과서 출판사를 통해 교과서 검정신청을 하였으며, 2009년 4월에 지유샤판 '신편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현행 사용 중인 중학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우익의 역사관을 대변하는 교과서는 2종류가 되었으며, 2009년도 이들 우익교과서의 교과서 시장점유율은 1.7%(후소샤 0.6% + 지유샤 1.1%) 정도이다.

일본의 패전 후, 연합군최고사령부(GHQ)는 군국주의 교육의 근간이 된 교육칙어(教育勅語)를 폐기하였다. 1947년에 평화헌법에 기초한 교육기본법이 시행되어 전후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 교육기본법이 2006년에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신교육기본법에 입각하여 개정·공포되었다.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주요 목표는 애국심과 공공의 정신, 전통 문화의 존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에도 애국심과 전통문화의 존중을 강조하는 교육기본법의 기본 취지가 반영되어 있어서 교과서 제작자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결국 일본의 교과서제도상 학습지도요령은 일본의 교과서 내용의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교과서조사관의 독단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거 역사교육으로의 회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가 제작되어 사용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편집-검정-채택 및 제조-사용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검정 부분에서 일본 정부=문부과학성의 입김이 작용하게 된다. 문부성은 1956년 12월에 문부성령으로 검정강화를 위한 '교과서조사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검정과정에서 실권을 쥔 교과서조사관은 당시 사회과교과서 가운데 다수 불합격판정을 내렸다. 지금도 문부과학성의 상근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임명과정이 불투명하고 교육현장의 경험이 없거나 교원면허가 없는 교과서조사관이 교과서검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검정제도에서는 검정 합격이 보류된 채로 검정의견이 개진되므로 출판사는 불합격을 피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의 요구대로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또한 출판사측에서는 수정 기간이 너무 짧아서 문부과학성의 지시대로 수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러한 교과서검정제도는 교과서검정을 검열과 같은 성격의 제도로 변하게 하였으며, 정부 의견에 반하는 내용을 게재한 교과서는 교과서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어 모든 교과서가 획일적인 내용으로 변해가게 되었다.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출력을 금지합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는 일본의 정치상황, 구체적으로는 보수우익세력이 주장하는 재군비와 헌법 개정의 움직임이 고조되는 시기와 맞물려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일본의 재군비와 자위대창설이 이루어 진 시기에 문부성은 교과서조사관제도를 신설하여 검정제도를 강화하였다. 1980년대에도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 교과서검정제도를 강화하여 출판사의 자주적 검정이라는 명분하에 특정 역사관을 집필자에게 강요했다.
1990년대에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완화되고 북한의 핵문제가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일본 정계에서는 사회당 등 혁신세력이 약화되고 보수 세력이 지반을 확대해 갔다.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보수 우익세력은 내부갈등을 완화시키고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보통국가화'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보수우익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한 전위조직이 '새역모'였으며, 이들은 과거사를 미화하고 위기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과서를 선택하였다. 물론 이들의 교과서 왜곡 내용과 논리는 과거와 유사한 내용이며 매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교과서문제가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정치적 타협으로 문제를 수습하여왔다. 2002년에 한일 양국정부는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이것으로 교과서문제 해결은 불충분했다. 이를 통해 역사인식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므로 학계의 연구를 심화하고 역사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유하게 되었다. 새역모의 왜곡교과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한중일 시민단체의 연대와 활동의 결과, 교과서문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레벨에서도 다각적이면서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경험하였다.

일본 역사교과서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다.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역사교육에 대한 정치 상황이나 관료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교육자는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수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바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역사공동교재 개발로 연결되어 일정한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 향후에도 한일 간에 역사대화와 각계각층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역사교과서문제의 해결에 필요하다.

6. 독도 영유권 논란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여론 조성을 위해 2월 22일을 소위 "죽도의 날"(죽도(竹島)는 독도의 일본명)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심화시키도록 하였다. 이처럼 최근 일본은 독도에 대한 교육,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에 가까이 있어(울릉도에서 87.4km) 육안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로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선시대 관찬문서인「만기요람」(1808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표하여, 울릉군수가 울릉도 본섬과 함께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하였다. 과거 일본 정부의 공문서조차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1696년 도쿠가와(德川)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渡海禁止)' 문서, 19세기 말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태정관 지시문'(1877년) 등이 그것이다. 특히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1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시하였다.

1904년 9월, 러일전쟁 초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독도 침탈을 주저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독도 편입청원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본 자료는 임의 수정 및 불법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러일전쟁 당시 일본 외무성의 정무국장이며, 대러 선전포고 원문을 기초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郎)는 독도 영토편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다.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

1905년 1월, 일제는 러일전쟁이라는 침략전쟁 중에 한반도 침탈의 첫 신호탄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침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침탈조치를 일본은 처음에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며 무주지 선점이라고 했다가, 후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재확인하는 조치라며 입장을 바꾸었다. 일본의 주장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년) 등 전후 연합국의 조치에 따라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회복되었다. 전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국총사령부는 훈령(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적, 행정적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은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해 침탈되었던 독도와 한반도에 대해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국민들은 일제의 한반도 침탈이라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현재 독도에는 한국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40여명 거주하고 있고,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평화롭게 드나들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함께 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독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일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